# 총력전체제기의 조선반도에 관한 일고찰
## -인적 동원을 중심으로-

키무라 칸(木村 幹)



## Ⅰ. 머리말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창씨개명, 신사참배. 조선반도에서의 일본 지배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말해지는 대부분의 사항은, 어느 것이나 1930년대 후반 이후, 소위 '總力戰期'에 일어나고 있다.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 그 자체가,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이고, 병합(倂合)에서 해방까지의 사이만 보아도 35년간이란 긴 시기에 걸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1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기가, 오늘날 일본지배에 대한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 '총력전기'에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35년간의 일본 지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나아가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이 시기는, 당시의 '대일본제국' 전역에, 전쟁수행이라고 하는 큰 목표 앞에, 국가나 경제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개인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용을 이루게 된 시기에 해당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중에서 '제국'의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서브시스템인 조선반도의 모습도 크게 변해가게 되었다. 이 의미에서, 총력전기의 조선반도를 가지고, 일본통치 전부를 대표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도,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총력전기와 그 이전의 시대 사이에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에 걸친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총력전기, 그리고 일본통치기의 조선반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총력전기와의 단절은, 총력전 이후의 시대, 즉, 해방 후의 시대와의 사이에는, 보다 현저하게 말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전은 카이로선언 이후의 연합국 측의 전후구상에서 밝혀진 것처럼, 즉각 조선반도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었다. 총력전 체제하,

사회의 표면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던 민족운동 세력은, 그 순간부터 일제히 활동을 재개하여, 문자 그대로, 한국사회의 양상을 일변시키게 된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러한 상황은, 직전의 총력전기가, 조선반도의 민족운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정체기에 해당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시기에야말로 엘리트레벨(층), 민중레벨(층)의 쌍방에 있어서, 수많은 '친일파', 즉 일본 통치에 대한 협력자가 만들어진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해방직후의 상황을 생각해보더라도, 당시의 조선반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통치를 환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 전후의 어느 시대와도 다른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총력전기의 조선반도를 일본 통치를 대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총력전기의 조선반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연구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이 시기의 조선반도에서 인적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 연구의 효시가 된 것은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 (미래사, 1965년)이다. 이 저작 이후, 총력전기의 조선반도에서 인적 동원을 둘러싼 문제는 일관해서, 일본 통치에서 가장 커다란 범죄적 행위의 하나인 '강제연행'으로 자리매김되어,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더구나,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문제는, 일본 각지에서 제기된 '강제연행'에 얽힌 소송과 일체화되면서, 일본에서는 김영달(金英達),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양태호(梁泰昊),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현저하여, 김상현의 ≪재일한국인: 교포80년사≫ (예문학사 , 1969년)를 커다란 효시로, 김상현, 정진성, 이복숙, 류시중, 박영석 등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2], 이들의 연구에 의해 조선반도에서의 인적동원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은 여기까지 비약적으로 크게 증대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3].

그렇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볼 때,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점도 밝혀지게 된다. 그 하나는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본래의 출발점에서 연구의 목적을, 일본에 의한 '전쟁범죄'의 추궁에 두고 있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대개 가치판단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중에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급한 나머지, 통계 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밀하지 않은 처리가 이루어져온 것도 있었다[4].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의 동원을 예로 들면, 내지나 혹은 다른 식민지에서의 동원과 비교하여, 도덕적, 윤리적 시점을 떠나,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동시에 학문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

1) 주요한 연구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식, ≪조선인강제연행의 기록≫(미래사, 1965년) ; 김상현, ≪재일한국인: 교포80년사≫(예문학사, 한국, 1969년) ; 김영달,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明石書店, 2003년) 등.

2) 예를 들면, 김인덕 편저, ≪강제연행연구≫(경인문화사, 2002년) ; 정혜경 편,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연구)≫ (경인문화사, 2002년) 등.

3) 이 문제에 관한 연구사는, 김인덕 편저, ≪강제연행연구≫(경인문화사, 2002년) 7쪽 이하에 잘 정리되어 있다.

4) 김영달 「<실태조사> 조선인 전시 노무동원 수에 대하여(朝鮮人戰時勞務動員數について)」, 동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 김영달은 이 중에서, 김문식, 박경식 등의 통계이용에서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의 문제는, 주로 조선반도에서 내지에로의 동원에 관한 활발한 사례 발굴이 이루어지는 한편에서, 그것을 조선반도에서의 동원의 전체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하는 노력이 경시되어 온 것 이다. 특히, 이 점은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 현저했다. 주로 시민운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일본 각지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의 현장조사나, 동원체험자에 대한 청취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편, 식민지지배 그것의 존재형태나, 동원의 존재양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노력만 있었을 따름이다. 이것은, 이것들의 청취조사가 총동원으로부터 수십 년 이상이나 나중에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그 연구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의 오인이나 모순, 거기에서 착오를 불러 일으켰다. 이 시대의 조선반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구축하는 데에 이들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정치적, 혹은 윤리적 논쟁에서 일단 거리를 두고, 이 문제를 냉정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재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은 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총력전이란 무엇이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쓰여 진 학술적 연구이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본래 총력전, 더구나 식민지나 전시하의 점령지에서의 총력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총력전을 경험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다른 나라・지역을 참조하면서 밝혀나간다[5]. 본고에서 다루는 것 같은, 한일 간에 있어서 미묘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나 사상(事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동시에 학술적 시점을 얻고 난 뒤에, 이러한 이론적, 비교사적 관점을 서로 나누는 일은 중요하다.

둘째로, 이러한 이론적, 비교사적 관점을 전제로, 조선반도에서의 인적총동원에 대해 정리한다. 여기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증언을 떠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사용한 마크로(거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의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의 전체상에 대해 가능한 대로 고찰을 한다.

셋째로, 이러한 정리를 전제로 한 다음에, 조선반도에서의 인적 동원이, 동원 체험자에 따라 어떻게 회상되고 있는가를 재고찰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당시의 동원 대상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특정의 샘플, 여기서는 한 권의 비교적 저명한 증언집을 이용해서, 그 고찰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마침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 대해 그런 것처럼 – 어떠한 역사적 증언에서도, 사람은 스스로 살아온 시대의 전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우리들은, 먼저 분석한 마크로 데이터와 개개인의 증언의 차이가 어디에 있고, 그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진행한다. 그러면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자.

---

5) 이러한 입장의 선행연구는, 강만길 외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선인, 2004년), 강만길, ≪식민통치 비교 자료집≫(선인, 2004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일본과 다른 열강의 식민지를 병렬에 두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의 차이나 원인까지 들어간 비교 연구는 아니다.

## II. 비교사 속에서의 총력전과 식민지

주지하는 대로,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명확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이다. 보불 (普仏) 전쟁 등의 경험에 의해,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예상된 이 전쟁은,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전으로 양상을 바꾸어, 결과적으로 각국은 이 새로운 형식의 전쟁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방대한 군사적, 경제적, 더구나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전쟁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기 위해, 각국은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을 지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6].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참전국의 대부분이, 광대한 식민지를 가진 식민지제국이었던 관계로, 식민지와 그 국민들도 가차없이 휩쓸려가게 되었다[7]. 각국의 식민지사에서, 이것은 커다란 정책의 전환이었다. 프랑스든 영국이든, 총력전 이전의 시대에서 각국의 중앙정부는, 식민지로부터 싼 노동력이 풍부한 본국에 유입되어, 그 결과로 본국인 측에 대량 실업이 생기는 것을 크게 경계하게 되었다. 배경에 존재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진행된 구미 각국의 민주화였다. 민주화 후의 각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대량실업의 발생은 즉, 유권자인 국민이 정권으로부터 이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국민의 고용을 지키는데 급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총력전의 개시는 이러한 방향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공전의 대량동원에 의한 대량파괴 대량살육전쟁은, 각국에서 군사력 혹은 노동력의 거대한 인적 자원을 필요하게 하였고, 참전국은 자신의 본국 인구만을 가지고 그것을 조달할 수 없었다. 한편, 식민지에는 방대한 인적 자원과 방대한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어, 각국은 여기에 주목하게 된다(표1).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비유럽계, 유럽계 쌍방의 주민을 합하여, 실로 55만 명 이상의 프랑스 '제국'의 사람들이 유럽의 전장에 직접 참가하여, 그 전사자는 10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8].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2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원되어, 프랑스 국내의 공장이나 작업장으로 보내졌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이 단계에서 알제리에서는 소집과 지원형식에 의한 병사의 동원과, 징용에 의한 노동자의 동원, 튀니지와 모로코에서는, 지원 형식에 의한 병사의 동원과, 징용 형식에 의한 노동자의 동원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나중에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인적자원 동원의 존재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식민지의 전쟁에 대한 공헌은 재정적으로도 다대한 것이었다. 1919년, 당시의 프랑스 植民地相이었던 앙리시몬은 '모든 면에서 식민지는 대단한 공헌을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9].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10].

---

6) 근대에서 총력전과 총동원에 대해서는, Chalres Townshend ed. The Oxford History of Modern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에 자세하다.

7) 제1차 세계대전과 거기에서의 총동원에 대해서는, Alan John Percivale Taylor, The First World War: an Illustrated History, London: Hamilton, 1964, 등.

8) 宮治一雄≪아프리카현대사 (アフリカ現代史) V≫ (山川出版社, 1978년) 80쪽 이하.

9) 구자비에 야코노, ≪프랑스 식민지제국의 역사(フランス植民地帝國の歴史)≫ 平野千果子 역(白水

제1차 세계대전시의 프랑스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알제리나 모로코에서 방대한 반란에 휩쓸릴 것이다. 튀니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한 클레망소의 예상[11]과는 달리, 총동원 체제하, 특히, 그 동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마그레브 제국이 예상보다도 훨씬 평온한 채로 經過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대전중, 프랑스가 세계 각지에 널린 그 광대한 식민지를 겨우 10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통치한 것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12].

같은 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보다 광범한 형태로 재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40년에 독일에게 항복후, 국내에서의 비씨정권, 해외에서의 망명 자유프랑스정권(소위, 자유프랑스)이 병립하는 가운데, 양 정권에 의한 격렬한 식민지 쟁탈 전쟁이 일어나, 식민지는 보다 직접적으로 전쟁에 휩쓸려갔다. 특히, 식민지에서 기반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유프랑스 측은 마그레브나 아프리카에서 방대한 병사, 노동력,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13]. 그렇다고 해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식민지로부터의 총동원이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것은 영국의 각 식민지에서였다. 예를 들면, 영령 (英領) 인도에서 제1차 세계대전시 8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영국[14]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동원을 더욱 확대하여, 병력으로서의 동원수는 2백50만 명을 넘게 되었다. 그것이 이 전쟁에서 연합국 측의 승리에 미친 역할은 매우 컸다(표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이 식민지에서의 커다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또 독일이나 일본 같은 추축국도 연합국 측을 배후에서 협박하기 위해, 식민지에 대한 공작에 힘을 쏟았던 것, 그리고 물론 나중에 회상되어 지는 것처럼, 양차 대전에서 식민지 국민들의 경험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던 점[16]을 생각한다면, 혹은 기이한 일로 조차 보일 지도 모른다. 그 위에 인도의 국민회의파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민족운동 각 단체 중에는 종주국의 위기 앞에 오히려 종주국에 협력하고, 추축국 측과 싸우는 것을 선택한 예조차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피지배자측의 지배자가 수행하는 총력전에 대한 소극적인 협력, 혹은, 적극적인 저항의 부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개시된 총력전이란 전쟁형태가,

---

社, 1998년) 86쪽.

10) 宮治에 의하면, 마그레브 제국으로부터는 26만 명의 병사와 13만 명의 노동자가 징병이나 징용이란 공적동원과, 지원이나 모집이란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전사자는 8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이 지역의 인구가 1500만 명 정도였다. 宮治一雄, ≪아프리카현대사 V≫ 80쪽 이하.

11) 구자비에 야코노,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역사≫ 85쪽.

12) 구자비에 야코노,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역사≫ 85쪽.

13)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식민지에 대해서는, Martin Thomas, *The French Empire at War, 1940-45*, Manchester: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에 상세하다.

14)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의 동원에 대해서는, Judith M. Brown and Wm. Roger Louis, eds.,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14-137.

15)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의 인적 동원에 대해서는, 木畑洋一, ≪지배의 대상: 영제국의 붕괴와 '제국의식'(支配の代償: 英帝國の崩壞と'帝國意識')≫ (東京大學出版會, 1987년) 143쪽 이하. 또, Judith M. Brown and Wm. Roger Louis, eds., *The Twentieth Century, pp.306-329.*

16) 예를 들면, Judith M. Brown and Wm. Roger Louis, eds., *The Twentieth Century*, p.330 이하.

실은 나폴레옹전쟁이후 구미에 있어서의 전쟁에 공통적인 성격, 즉, 내셔널리즘이란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동원력에 지탱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게 된다[17]. 즉, 사람은 거기에 있는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야 말로, 거기에 나아가 협력하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스스로의 목숨을 위험에 드러내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종주국의 전쟁은, '다른 사람의 전쟁', 보다 심하게는 '적의 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협력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은 식민지의 그것과는 다른 점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지만, 총력전에서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지배자측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않은 피지배자측을 동원하여, 자신을 위한 전쟁에 동원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사한 사례인 1940년 對獨 항복 후의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동원일지도 모른다. 대독 항복 이후의 프랑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존재하고, 그 중에 밝혀진 것은 소위 '레지스탕스신화'로 말해지는 것과 달리, 패전 초기의 프랑스에서도,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레벨에서의 대독협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던' 독일을 위해 노동으로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18] 일반시민의 생활상태와 사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침울한 공기가 사회를 지배하고,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프랑스에는, 식민지와 다른 커다란 차이도 있었다. 즉, 그것은 적어도 상류계급 사이에는 'BBC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종의 병리학적 현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프랑스인은, 독일 점령하에서 조차, 연합국 측으로부터 나온 정보에 접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것을 통해 지배자측이 제시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바꾸어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戰局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1943년 2월 16일, 독일에 의한 STO라고 불리는 강제노동징용이 시작된 단계에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운동은 비약적으로 활성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독일에 협력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일이 프랑스로부터의 대량동원을 단행한 배경에,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전이 있던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독일의 징용에 응할까,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 레지스탕스에 참가할까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여러 도시와 군수공장은 지금은 연합국의 공폭대상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레지스탕스를 선택한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독일에 보내진 프랑스인 노동자 수는, 남성 65만 명, 여성 4만 4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수는 이 당시 독일에서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던 외국인수로는, 폴란드인의 그것[19]에 다음가는 두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17) 'Introduction', Charles Townshend ed., *The Oxford History of Modern War.*

18) 프랑스로부터 독일에의 동원에 대해서는, 로버트 팍스톤, ≪비씨시대의 프랑스: 대독협력과 국민혁명(ヴィシー時代のフランス:對獨協力と國民革命) 1940-1944≫ 渡辺和行 ; 劍持久木 역(柏書房, 2004년), http://www.sunderland.ac.uk/~os0tmc/occupied/collab.htm(최종확인 2004년 9월 21일) 등.

19) 伊東孝之 ≪폴란드 현대사(ポーランド現代史)≫ (山川出版社, 1988년).

그러면 이러한 다른 나라에서의 총력전기의 경험은 조선반도에서의 그것에 어떠한 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에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

## III.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의 전개와 특색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제1차 대전에서 시작되는 총력전에 의해 이제까지 식민지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견해가 일변하여, 그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본국에 동원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같은 것은 일본 통치기의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戰前期 일본에서의 '인구과잉'을 둘러싼 의논일 것이다[20]. 당시의 일본에서는 일본은 그 협소한 국토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인구를 안고 있고, 그것은 일본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주지대로 이러한 의론은 일본의 해외팽창, 특히 만주에 대한 진출을 정당화할 때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과 조선반도 사이의 노동력을 둘러싼 의논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총력전기 이전의 일본, 특히 정당내각기의 일본정부는 조선반도의 잉여 노동력이 내지에 유입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내지로의 노동력 이동을 저해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힘을 쏟게 된다[21]. 병합 직후의 동양척식회사를 둘러싼 논의[22]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히려 내지의 잉여 노동력을 조선반도에 이주시키는 것에 의해, 내지의 인구 압력을 완화하는 것조차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서도 이러한 규제의 그물을 빠져나간 내지로의 노동력 이동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보였지만, 그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의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그 통제력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어느 것이라도 국가가 방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조선반도에서 내지로의 노동력의 이동과, 총력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안이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말해도 위험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변하는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내지의 노동시장이 一轉하여 절박하게 된 뒤의 일이 된다. 동원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수의 산출방법은 대략 말해도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최초로 전쟁수행에 필요한 각종 산업에서 생산량이 推計되어, 그것에 응해 내지의 투입 필요 노동량이 결정된다. 이 숫자로부터 내지에서 노동공급량이 공제되어, 그 차가 외지로부터 내지에의 노동공급량이 되는 것이다[23]. 계획을 맡은 것은 기획원, 조선반도 측에서 이것을 실시한 것이 조선총독부이다[24]. 총독부는 이러한 요구에 답하기[25] 위해, 1938년 이후 여러 가지 노무통

20) 예를 들면, 마크 피티, ≪식민지: 제국 50년의 흥망(植民地: 帝國50年の興亡)≫(讀賣新聞社, 1996년), 254쪽 이하.

21) 이 점에 대해서는 森田芳夫, ≪숫자가 말하는 재일한국 · 조선인의 역사(數字が語る在日韓國 · 朝鮮人の歷史)≫ (明石書店, 1996년) 65쪽 이하.

22) 黑瀨郁二 ≪동양척식회사: 일본 제국주의와 아시아태평양(東洋拓植會社: 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社, 2003년) 13쪽 이하.

23) <1939년(昭和14)년도 노무동원실시계획(기획원)>외, 전후보상문제연구회 편, ≪전후보상문제자료집≫ 제1집(전후보상문제연구회, 1990년)에 수록된 자료의 各所.

24) 김영달 <<실태조사>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수에 대하여> ;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 72쪽 이하.

제법령을 제정 실시해서, 그 체제를 정비한다[26]. 다음 39년에 들어가면, 내지 정부는 내지에서 노무동원 계획을 실시, 조선총독부도 여기에 맞추어, 종래의 '모집' 허가에 의한 개별도항에 더하여, 내지 측 사업주에게 도항에 관한 일체를 알선시키는 집단도항 방식을 조선반도 내에 실시한다. 즉 총독부가 노동력을 계획적으로 송출할 때에 직접적 관여를 시작하는 것은 1939년 이후가 되는 것이다[27].

조선반도에서의 동원은 결과적으로 조선반도 내에서 노동수요를 핍박시켜, 그 결과, 1940년에 들어서 총독부는 조선반도 내에서도 노무동원 계획을 책정하게 된다. 내지에 대한 노동력 송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던 개별도항을 없애고, 집단도항으로 통일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총독부는 전쟁수행에 관한 노동력에 대해서, 전면적 관리로 진행시키게 된다. 41년에는 군 관계 노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징용'을 실시, 42년 이후는, '모집' 허가에 의한 노동력 동원에서도 개별 사업주에 의한 알선을 폐하고, 총독부가 노동력의 모집, 選考, 송출에 직접 대응하는 소위 '관알선' 집단 송출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이행했다. 노동력 동원에서 '모집' 형식, 즉 민간의 관여에 의한 노동력 모집을 여기에서 폐지한 까닭이다. 아울러 받아들이는 측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응하기 위해, 도일 전에 노동자를 교육하는 '鍊成所'를 조선반도 각지에 설치했다. 1944년 9월부터는 '일반징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終戰까지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은, '징용'으로 단일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갔다[28].

이러한 조선반도에서의 인적 동원의 전체상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 정부가 정보공개를 늦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의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달의 그 우수한 연구에서 명확하게 나타낸 것처럼, 이러한 조선반도에 있어서 총동원의 모습은 금일 밝혀져 있는 자료 만에서라도 그 수량적 규모에 대한 개요를 대략 밝힐 수 있다[29]. 즉 현재 밝혀진 것 만에서도 우리들은 조선반도로부터의 인적 동원에 대해서 그 계획하는 측, 송출하는 측, 받아들이는 측의 각각의 데이터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입수할 수 있고, 이것들은 각각 일정한 정합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또 각각의 자료의 대부분은 그것이 만들어진 경위나 시간상 그 수치를 조작할 의도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 숫자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자료 중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총동원의 모습을 모두 망라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재외조사회 편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조사(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

---

25)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지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일체화해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총독부는 제도상, 천황에 직속하는 조선총독이 통괄하는 관청이고, 제국의회는 물론, 내각의 직접적 영향 아래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의견조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近藤釼一 편, ≪태평양전하의 조선(太平洋戰下の朝鮮)(1)≫ (友邦協會, 1962년) 25쪽 이하의 水田直昌의 회상.

26) 법령 등에 대해서는 樋口雄一 편,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集≫ 제1-5권(綠蔭書房, 2000년)을 참조.

27)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活動に關する調査≫ (湖北社, 1977년) 66쪽. 동서는 在外財産調査會 편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朝鮮編≫ (大藏省管理局, 1948년)의 일부를 복각한 것이다.

28)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 65쪽 이하.

29) 김영달 <<실태조사>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수에 대하여>.

する歷史調査)≫에 제시된, ‘송출 측’인 조선총독부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통계 자료일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반도에서의 내지, 사할린(樺太), 남양에 대한 노동력 송출은 1939년부터 종전까지의 사이에 72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 숫자는 조선반도에서 동원된 단계에서의 숫자이고, 실제로는 동원하는 곳에서부터 받아들인 곳에 이르기까지 도망간 자나, 특히 전쟁의 말기에는 전황 악화에 의해 도항이 곤란하게 된 자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정된 받아들이는 측에까지 도달한 자는 이것보다도 소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동원에 관한 수치에서도, 내무성이나 후생성, 즉, 받아들이는 곳에서의 수치가 적게 나타난 것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또 조선인 가운데는 후술하는 사례처럼, 총력전기 이전에 조선반도에서 내지로 自主渡航하고, 내지에서 징용 등에 걸린 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보내는 측’의 숫자가 전체 조선인의 피동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쨋든 이러한 조선반도에서의 대량의 인적 동원은, 아울러 실시된 11만 여 군인으로서의 동원, 더구나 태평양전쟁 이후의 조선반도 내부를 향한 동원 강화와 함께, 조선반도내의 노동력 수요를 현저하게 핍박시켰다. 그 결과, 총독부는 조선반도 내에서 노동력 관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44년에는 조선반도 안을 향한 것만으로도 2백55만 명 이상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조선반도 밖을 향해서는 30만에 가까운 동원으로, 이 해에 동원된 사람들의 수는 2백84만 명을 넘고 있다.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조사≫에 의하면, 이 숫자는 ‘농촌의 일할 수 있는 연령층(18세부터 55세), 대략 2백40만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30]. 만일 이 기술이 맞는다면 이 자료는 1944년의 조선반도에서 인적자원이 한계에 이르기 까지 동원되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나타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동원의 내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이상, 표3, 표4, 표5, 표6)

어쨌든 이상과 같이 볼 때, 분명해지는 것은 1938년 이후 국가에 의한 총동원 체제의 그물코가 점차 확대되어, 드디어 1944년경에는 조선반도의 노동력 전부를 덮게 된다는 모습일 것이다. 배경에 있었던 것은 내지에서의 동원이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과 비교해서 늦어진 산업구조를 가지고, 특히 식량공급 확보를 위해 농업에 커다란 노동력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표7, 표8)은, 전쟁의 빠른 단계부터 民需産業을 희생한 동원 체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일본은 스스로 인정하는 ‘이민족’인 조선인에 대한 대규모 동원을 하게 된다[31].

이상과 같은 동원의 형태를 도표화 하면, 도표 1부터 도표 5처럼 된다. 이 도표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의 특징은, 조선반도에서 내지로의 동원보다는 오히려 조선반도 그것이 일본의 총력전 체제에 강고하게 들어가, 조선반도 내의 노동력이 강력하게 관리 통제된 것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도표1에서 밝혀진 것처럼, 동원의 대상이 된 노동력의 총수에 대해서 道內 동원은 항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동원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오히려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 ‘이민족’의 모든 노동력을 동원하는 형태는 다른 식민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내선일체’를 원칙으로 내걸면서, 조선반도를 ‘이법지역’으로 대우하는 일본 통치의 특수성의 일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식민지 지배의 형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 다음에

30)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 72쪽.
31) 大江志乃夫 편 · 해설, ≪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動員概史≫ (不二出版, 1988년) 433쪽 이하.

이 점에 대해서 논의 해 보고 싶다.

## Ⅳ. ‘강제연행’과 총동원

여기까지 밝혀진 것을 정리해 보자. 제1장에서 밝혀진 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총력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들이 식민지를 포함하는 자신들의 지배지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동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보였던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동원 방법을 하나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지원’ 이나 ‘모집’에 의한 것에서, ‘징병’이나 ‘징용’과 같은 명백한 위로부터의 강제적 할당의 형식을 취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주국의 전쟁’을 위한 총동원에 대한 식민지에서의 활발한 저항운동은 적어도 보편적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동시에 전쟁 후의 민족운동의 전개로부터 밝혀진 것처럼, 그것은 그들이 ‘종주국의 전쟁’을 환영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에 대해서, 주로 그 방법의 변천과 숫적 개요에 대해 고찰했다. 그 결과, 이상과 같은 다른 식민지에서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조선반도에 서의 총동원의 최대 특징은, ‘동원이 일어난 것’보다도, 오히려, ‘동원의 범위가 광범위에 미친 것’, 더구나 내지나 戰地를 향한 것이 아니고, 조선반도 내에서 대규모적인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의 특색이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할 지면의 여유가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일지도 모른다. 즉, 첫째로,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의 인적자원 수급이 다른 전쟁 주요 참가국에 비교해도 매우 핍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 둘째로, 일본이 실태로서는 차치하고, 조선반도 지배에서 이데올로기적 원칙으로 ‘내선일체’를 주창하고,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조선반도에서도 내지와 같은 지배 체제를 취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항간에서 잘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총력전 체제하, 일본은 자신의 식민지 지배의 원칙과 실태의 모순에 직면했다. 그 심한 것이 스스로도 인정하는 ‘이민족’인 조선인을, ‘동지’로서 동원한다고 하는 모순된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당시 조선반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는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로 비교적 잘 알려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편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强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證言)≫ (明石書店, 1990년)에서 보기로 하자. 이 자료에서는 도합 23명의 ‘체험자’의 증언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 사례를 목차에서 보면, 12건, 13명의 ‘강제연행’에 관한 사례와 10건, 10명의 ‘강제노동’에 관한 사례로 구분되어 있다.

‘강제연행’과 관련된 10건의 사례 개략은 (표 9)와 같다. 한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다. 첫째로, 여기서 들고 있는 사례에서는, 모두가 1944년 9월의 일반징용 개시이전 시기의 동원이라고 하는 것,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자신이 ‘징용’에 의해 일본에 동원되었다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조사≫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1944년 9월 이전에는 일반노무에 대한 징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고, 그 범위는 '군 관계 방면 노무'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것은 이미 통계적 수치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주목되는 것은 이제까지의 분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히 1942년부터 43년까지 조선반도에서의 내지에 대한 인적 동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을, '관알선'에 관한 진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넷째로, 1939년, 즉, '관알선' 실시 이전,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가 노동자 모집에 직접 손을 대기 이전의 사례도 2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로, 사례 중에는, "소를 끌고 땔감을 줍고 있는데 붙잡혀 갑자기 일본에 끌려갔다[32]"고 하는 진술도 3건 존재한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적기관의 관여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생각해서 내지 사업주에 의한 '모집'이 위법으로 행해진 사례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본고에서 말해 온 것처럼, 총력전 체제 돌입에 따른 공적인 동원체제의 실시에 관한 의논과, 이들 증언 사이에는 분명한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견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같은 '강제연행'이라는 틀 속에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래, 여러 논자에 의해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어 왔다[33]. 그러한 혼란된 '강제연행'이란 용어의 사용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이 말을 이 말이 가진 본래의 의미, 즉, 문자 그대로, 조선반도의 사람들을 물리적 폭력에 의해 힘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에 수록된 사례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말한 '모집'이 위법으로 행해진 것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총력전하에서의 동원 전부를 '강제연행'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을 세워, 이것을 강행한 결과가 '노예사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강제연행[34]' 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세 번째 정의는,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반도에서 내지에 대한 모든 노동이동을 '강제연행'으로 보는 것이다. 즉, 그들에 의하면 식민지 지배 그것이 이미 조선인에게 '강제'된 것인 이상, 거기에서 모든 노동은 '강제'된 것이 된다. 학술적 저작에서 이 입장을 명확한 형태로 취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앞에 말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도, 총력전기 이전의 일부의 사례가 '강제연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경식이 얼마간의 의미에서 '강제연행'이란 용어를 이 세 번째 정의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강제연행'이란 용어를 둘러싼 혼란은 용어의 多義性보다도 오히려 박경식의 예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논자가 사용하는 그 말의 의미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는 일 없이, 혹은 때로는 스스로가 저작의 冒頭에서 정의한 의미를 일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도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이 저작은 강제연행을 두 번째 정의로 명확하게 하는 한편으로, '강제연행'과는 별도로 '강제노동'의 사례-더구나 그 모든 사례에서 체험자는 총력전기보다도 상당히 이른 단계에서 내지로 이동하고 있다-도 그

32)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편,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증언(强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證言)≫ (明石書店, 1990) 41쪽.

33) 이 말의 亂用이 가진 문제성에 대해서는, 김영달,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 ; 鄭大均, ≪在日・强制連行の神話≫ 등의 각소.

34)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편,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증언≫ (明石書店, 1990년) 17쪽.

‘증언’으로 내걸고 있다. 同著에서는 이들의 ‘강제노동’의 사례가 ‘강제연행’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은, ‘강제연행’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집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이러한 자료집에 수록된 ‘증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집의 편찬보다도 그들의 ‘증언’과 각종 사료가 나타내는 공적동원에 관한 기술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이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어느 쪽인가의 한편을 무전제로 ‘잘못이다’라고 해 버리는 것과 같은 방법은[35], 적어도 학문적으로 성실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김영달의 일련의 저작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대부분은, 여러 연구자의 손에 의해 그 일정한 신빙성을 확인한 것이고, 또 그 작성의 경위로 말해도, 현상을 크게 비틀어버릴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어렵다. ‘증언’에서도, 그 대부분이 40년 가까운 연월을 거친 후의 청취 조사의 결과로, 기억의 착오나 후세의 의론이나 정치적 상황에서의 영향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들 ‘증언’이 문헌자료에 의해 보충할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한, 귀중한 ‘사료’라고 하는 것도 역시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최초의 단서가 되는 것은 문헌자료에서는 조선반도의 총동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관알선’이 어떻게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에 수록된 ‘체험자’의 회상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말한 것처럼, 조선반도에서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반 징용이 개시된 것은 1944년 8월, 각의결정을 거친 후의 일이고, 그 이전의 징용은 좁게 ‘군 관계 노무’에 한정되어, 그 수도 조선반도에서 내지로의 동원전체에 대해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36]. 징용되어진 장소 등의 성격에서 보자면,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에 수록된 사례에서는, 이 이전에 내지에 이미 이주하여, 내지에서 징용을 받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것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와 ‘증언’의 양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래 당시의 조선반도 사람들의 의식 중에는, ‘관알선’이라는 독자의 분류는 존재하지 않고, ‘관알선’과 ‘징용’을 일괄해서, ‘징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알선’과는 달리, ‘모집’ 쪽이 여러 자료[37]에서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의해 뒷받침되어 질지도 모른다.

흥미 깊은 것은 이들 사례의 대부분에서, ‘체험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징용’을 거부할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38] 것이다. 이것은 ‘관알선’과 ‘징용’의 본래의 제도적 위상과는 크게 다르다. 즉 적어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경우 制裁가 있는’ 것은 ‘징

---

35) 예를 들면,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12쪽에는, “일본의 공안관계 통계자료가 충분할 리가 없다”고 명확한 근거 없이 기재되어 있다.

36) 앞의 표3 참조.

37) 예를 들면,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이외에도, 坪内廣清 ≪‘모집’이란 이름의 강제연행: 듣고 쓴 어느 재일 1세의 증언(‘募集’という名の强制連行: 聞き書き ある在日一世の證言)≫ (彩流社, 1998년), 金贊汀 편저, ≪증언 조선인강제연행(證言 朝鮮人强制連行)≫ (新人物未來社, 1975년) 등.

38)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의 各所.

용' 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 내부에서는 '일정 수의 인원수를 절대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면 징용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39]. 그렇지만 동시에 총독부의 주변에서도 당시의 조선반도에서는 '관알선도 반은 강제적'이라는 이해[40]가 있었던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확보를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모집'과 노동자의 동원에 있어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이용해서 총독부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가지는 '징용'과의 사이에서, 노동력 확보에 총독부가 '알선' 즉, 도와준다고 하는 '관알선'은 모집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자유라고 하는 '모집'의 원칙과 모집에 응할 수밖에 없는 '징용'의 본질, 쌍방의 성격을 가진, 본래 완전하지 않은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관알선'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던 당시, 이미 내지에서는 본격적인 '징용'이 개시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하의 특수한 사회상황과 더불어, 조선반도의 사람들이 '관알선'을 기본적으로 '징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 '관알선'의 예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은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의 존재방식과 실시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사람들, 특히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증언≫에서 말하는 '체험자'의 이해와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총동원을 둘러싸고, 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어느 쪽인가 한편 – 즉 조선총독부를 포함하는 일본정부나 '체험자'의 어느 쪽인가– 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이젠 하나의 가능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본래 어딘가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결과로서 공식적인 제도의 취지나 방법이, '체험자'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가능성이다.

현재의 단계에서, 필자는 반드시 그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조선반도에서 총동원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의논의 상당한 중요 부분은 이 제도적 원칙과 '체험자'에 의한 인식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V. 정보의 차이와 총동원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보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의 하나는, '체험자'가 동원과, 자신이 동원되어 간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총독부에 의한 동원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가령 동원의 대상이 된 자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각각의 행동을 취한 경우,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을 고려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거꾸로 같은 행동을 선택할 경우 잃어버릴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통상, 그리고 전시 중과 같은 강고한 정보통제[41]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39)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 72쪽.
40)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 72쪽.
41) 전시하에 있어서 정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유진오, ≪養虎記≫(고대출판부, 1977년)의 各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로 중요한 것은 우선 3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동원을 거부할 경우의 직접적 손실이다. 그것은 즉, 어떠한 제재가 존재할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대우되어 질 것인지 이다. 두 번째는 동원되어지는 곳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다. 동원되어지는 곳의 노동은 어느 정도 가혹한 것이며 , 또 그 계약이나 보수는 어떻게 될까? 자신의 신변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고, 조선에 돌아간다면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본래 전쟁 그리고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 지배의 미래를 어떻게 볼지 이다. 일본이 전쟁에 승리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지배는 계속된다. 이 경우 총동원에 응하지 않는 것에 의한 장기적 손실은 크다. 거꾸로 이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혹은 프랑스인 같이 레지스탕스로 일어서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니, 일본이 패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본이 패한 경우 연합국은 조선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독립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새로운 식민지로 바뀌는 것뿐인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여러 갈래에 걸쳐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본대로, '체험자'들의 대부분은 '관알선' 중심의 시기부터 적어도 동원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느 '체험자'는 '징용을 피해 잡히면 형무소에 집어넣는다'고 듣고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42]. 마찬가지로, '징용은 절대조건이었다'고 하는 회상도 있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징용', 정확하게는 '관알선'도 포함되는 '징용'을 거부하면, 형벌을 포함하는 제재가 가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징용'에서, 경관 등, 공권력에서 파견된 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집'의 사례에서, '手配師'라고 말할만한 사람들이 개재하여,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43].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체험자'의 대부분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끔 면사무소 등이 모집 장소로 사용되고, '수배사'가 면서기라는, 관료와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었다[44]고 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민간의 '모집'이거나, 총독부에 의한 '알선'이거나 그들에게는 '일본에 의한 동원'이라고 간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동원되어지는 곳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하다[45]. 그렇지만 대부분의 '체험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동원 당초에 듣고 있었던 것보다 실제의 노동조건은 훨씬 가혹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총력전기보다 이전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 국내에서 '징용'을 받은 사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여 지는 것으로, 당시의 선전과 현실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그것이 전쟁 후 사람들에게 인적 총동원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했던 것은 '체험자'들의 대부분이 당초의 계약기간을 넘어도, 전쟁수행 중은 조선반도에 돌아가는 것을 결과적으로 허락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42)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35쪽.
43) 예를 들면, ≪강제연행 된 조선인의 증언≫ 29쪽, 또 '수배사'에 대해서는 김찬정 편저, ≪증언 조선인 강제연행≫의 各所에도 자세하다.
44) 김찬정 편저, ≪증언 조선인 강제연행≫ 13쪽 이하.
45) 예를 들어, 1941년경이 되면, '모집'하는 곳에서의 노동조건이 매우 나쁜 것은 편지 등으로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고 한다. 김찬정 편저, ≪증언 조선인 강제연행≫.

점은 총독부에 가까운 자료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당시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46]. 이 의미에서, '강제연행' 보다도 '강제노동' 쪽이 본질적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김영달의 지적에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47]. 전시하라고는 해도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도 위법인 노동이 강제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48].

셋째로, '체험자'들이 전쟁과 조선의 행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의 명확한 회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오히려 주목할 것은, 그들의 회상 중에 '동원을 거부해서 도망 간다'고 하는 선택지는 존재해도,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현저하게 보이는 것 같은 '동원을 거부해서 민족운동에 참가 한다'고 하는 선택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것은 같은 '동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니고, 군인이나 군속으로 '동원'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동원'의 당초부터 군대에서 도망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밖의 민족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선택지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49]과는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배경으로는, 총력전기에서는 조선반도나 내지에서 조선인의 민족운동이 심각한 정체상태에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조선반도나 내지가 강고한 정보통제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당시의 조선반도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조선인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유진오는 일본 패전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50].

> 그렇지만 일본의 패전이 가깝다고 하는 것만은 알고 있어도, 1943년의 카이로선언도 겨우 수주간 전의(1945년 7)월말의 포츠담선언도 역시 히로시마(廣島)나 나가사키(長崎)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국내의 사람들은,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항복하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
> 사실, 당시의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길 상태 가운데, 우리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고, 암흑의 동굴 한 가운데에서 장기에 걸쳐 유폐되어 왔던 사람이 갑자기 눈부신 동굴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와 같이, 우리 민족이 허둥대는 것처럼 된 것에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51].

> 프랑스에서 독일의 총동원이 레지스탕스 운동에의 참가를 가져온 배경에는,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패전과 그 정보를 BBC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프랑스의 독특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반도의 사람들도, 미드웨이 해전 후의 전선의 확대와 과달카날에서의 '전진'에서 '일본의 패전이 가까운' 것을 전혀 推察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推察'을

46)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 72쪽.
47) 김영달 <'조선인 강제연행'의 개념에 대하여('朝鮮人强制連行'の概念について)>, 동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 28쪽.
48) 단 조선반도로부터의 피동원자 모두가 '강제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鄭忠海, ≪조선인 징용공의 수기(朝鮮人徵用工の手記)≫ 井下春子 역(河合出版, 1990년).
49) 유진오, ≪養虎記≫ 102쪽 이하 ; 박경수 편, ≪'정치가' 장준하≫ (돌배게, 2003년) 등.
50) 유진오, ≪養虎記≫ 134쪽.
51) 유진오, ≪養虎記≫ 136쪽.

'확신'으로 바꿀만한 정보가 없었고, 게다가, 일본의 패전 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그 의미에서 '자유프랑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프랑스인과, '카이로선언'을 알지 못했던 조선반도의 사람들 사이의 정보 차이는 한없이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치고 싶다.

## Ⅵ. 맺음말에 대신하여－총력전기라는 시대

본고에서 말해온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조선반도에서 총력전기, 특히 거기에서의 인적 동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일 양국에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것에 의해 여러 가지가 밝혀져 왔다. 본고에서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먼저, 조선반도 이외의 식민지에서의 총동원이나, 프랑스에 있어서 독일의 노동력 동원 등에 대해 본 다음에, 조선반도에서의 그것과 비교를 시도했다. 거기서 밝혀진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총동원이 다른 식민지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광범한 범위에 미친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 데는, 종래 간과하기 쉬웠던, 조선반도 내부에서의 총동원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조선반도의 총동원이 당시의 '체험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를 분석했다. 거기에서 밝혀진 것은, '체험자'들의 이해가, 조선총독부나 내지정부가 남긴 문헌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어느 쪽인가 한 쪽에 신빙성을 두고, 다른 쪽의 자료적 가치를 경시한다고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본고에서는, 그것을 공적인 제도와 '체험자'의 인식의 차이가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여,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전시하의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강력한 정보통제와, 그것에 의한 전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착오를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본고의 고찰은, 필자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와 무엇보다도 필자 자신의 능력의 부족에 의해,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이 향후 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자료나 증언의 발굴이상으로, 이제까지 발굴해 온 대량의 자료나 증언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차이나 착오를, 어떻게 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혹은 과도하게 도덕적인 색채를 띤 의논을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지금이야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表 1〉 第一次世界大戰에 있어서「帝國」에서의 動員數

| | | |
|---|---|---|
| 영국 | | |
| 캐나다 | 630,000 | |
| 오스트레일리아 | 412,000 | |
| 南아프리카 | 136,000 | |
| 뉴질랜드 | 130,000 | |
| 인도 | 800,000 | 메소포타미아 戰線만 |
| 아프리카 諸植民地 | 50,000 | |
| (중국) | (200,000 300,000) | (노동자로) |
| 프랑스 | | |
| 「제국」전체 | 600,000<br>200,000 | 兵士<br>勞動者 |

Charles Townshend ed. *The Oxford history of modern war*,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135에서 作成.

〈表 2〉 第二次大戰의 영국의 兵力 動員

| | |
|---|---|
| 영국 | 5,896,000 |
| 캐나다 | 724,023 |
| 오스트레일리아 | 938,277 |
| 뉴질랜드 | 205,000 |
| 南아프리카 | 200,000 |
| 인도 | 2,500,000 |
| 東아프리카 | 228,000 |
| 키프로스 | 9,000 |
| 西아프리카 | 146,000 |
| 팔레스티나 · 트랜스 요르단 | 25,000 |
| 카리브 植民地 · 버뮤다 | 10,000 |
| 세일론 | 26,000 |
| 말타 | 8,200 |
| 피지 | 7,000 |

木畑洋一 ≪支配의 代償: 英帝國의 崩壞와 <帝國意識>≫ (東京大學出版會, 1987年) 85쪽에서 作成.

〈表 3〉 朝鮮半島의 勞務動員 (動員形式別：1942年度～1944年度)

| 動員先 | 動員形式 | 1942年度 | % | 1943年度 | % | 1944年度 | % |
|---|---|---|---|---|---|---|---|
| 朝鮮 | 官斡旋 | 49,030 | 9.4 | 58,924 | 6.7 | 76,617 | 2.6 |
| | 徵用 | 90 | 0.0 | 648 | 0.1 | 19,655 | 0.7 |
| | 軍要員 | 1,633 | 0.3 | 1,328 | 0.2 | 112,020 | 3.8 |
| | 道內動員 | 333,976 | 64.1 | 685,733 | 77.7 | 2,454,724 | 82.9 |
| | 小計 | 384,729 | 73.8 | 746,633 | 84.6 | 2,663,016 | 90.0 |
| 日本 | 官斡旋 | 115,815 | 22.2 | 125,955 | 14.3 | 85,243 | 2.9 |
| | 徵用 | 3,871 | 0.7 | 2,341 | 0.3 | 201,189 | 6.8 |
| | 軍要員 | 300 | 0.1 | 2,350 | 0.3 | 3,000 | 0.1 |
| | 小計 | 119,986 | 23.0 | 130,646 | 14.8 | 289,432 | 9.8 |
| 기타 | 軍要員 | 16,367 | 3.1 | 5,648 | 0.6 | 7,796 | 0.3 |
| | 徵用 | 135 | 0.0 | | | | |
| | 小計 | 16,502 | 3.2 | 5,648 | 0.6 | 7,796 | 0.3 |
| 小計 | 官斡旋 | 164,845 | 31.6 | 184,879 | 20.9 | 161,860 | 5.5 |
| | 徵用 | 4,096 | 0.8 | 2,989 | 0.3 | 220,844 | 7.5 |
| | 軍要員 | 18,300 | 3.5 | 9,326 | 1.1 | 122,816 | 4.1 |
| | 道內動員 | 333,976 | 64.1 | 685,733 | 77.7 | 2,454,724 | 82.9 |
| 合計 | | 521,217 | 100.0 | 882,927 | 100.0 | 2,960,244 | 100.0 |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 71-72쪽 所收의 各 表에서 作成. 분명한 계산 잘못 등은 적절하게 정정했다.

〈表 4〉 朝鮮半島外의 勞務動員 (행선지별)

| 年度 | 當初計劃數 | 石炭山 | 金屬山 | 土建 | 工場 외 | 合計 |
|---|---|---|---|---|---|---|
| 1939 | 85,000 | 34,659 | 5,787 | 12,674 | | 53,120 |
| 1940 | 97,300 | 38,176 | 9,081 | 9,249 | 2,892 | 59,398 |
| 1941 | 100,000 | 39,819 | 9,416 | 10,965 | 6,898 | 67,098 |
| 1942 | 130,000 | 77,993 | 7,632 | 18,929 | 15,167 | 119,721 |
| 1943 | 155,000 | 68,317 | 13,763 | 31,615 | 14,601 | 128,296 |
| 1944 | 290,000 | 82,859 | 21,442 | 24,376 | 157,755 | 286,432 |
| 1945 | 50,000 | 797 | 229 | 836 | 8,760 | 10,622 |
| | 907,300 | 342,620 | 67,350 | 108,644 | 206,073 | 724,687 |

년도별 숫자이다.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68쪽 所收의 表에서 作成.
분명한 계산 잘못 등은 적절하게 정정했다. 또한 1944년도 도원계획수는 년도 중도에서 326,000으로 변경되어 있다. 1945년도의 숫자는 제1 사분기의 것이다.

〈表 5〉道內 動員의 內譯 (動員形式別)

| | 1944年 |
|---|---|
| 道內官斡旋 | 492,131 |
| 勤報隊 | 1,925,272 |
| 募集 | 37,321 |
| 合計 | 2,454,724 |

<在外朝鮮人の保護 戰爭と朝鮮統治>72쪽 本文에서 作成.

〈表 6〉 朝鮮半島의 兵力動員

| | 陸軍特別志願兵 | | 海軍特別志願兵 | | 學徒志願兵 | | 小計 | | 徵兵 | | |
|---|---|---|---|---|---|---|---|---|---|---|---|
| | 志願者數 | 訓練所入所者數 | 志願者數 | 訓練所入所者數 | 學徒志願者 | 採用入隊數 | 志願者 | 採用數 | 陸軍 | 海軍 | 動員總數 |
| 1938 | 2,946 | 406 | | | | | 2,946 | 406 | | | 406 |
| 1939 | 12,528 | 613 | | | | | 12,528 | 613 | | | 613 |
| 1940 | 84,443 | 3,060 | | | | | 84,443 | 3060 | | | 3,060 |
| 1941 | 144,743 | 3,208 | | | | | 144,743 | 3208 | | | 3,208 |
| 1942 | 254,273 | 4,077 | | | | | 254,273 | 4077 | | | 4,077 |
| 1943 | 303,294 | 6,300 | | 1,000 | 3,366 | 3,117 | 306,660 | 10417 | | | 11,193 |
| 1944 | | | 90,000 | 2,000 | | | 90,000 | 2000 | 55,000 | 10,000 | 67,000 |
| 1945 | | | | | | | | | 55,000 | 10,000 | 65,000 |

戰後補償問題硏究會 편≪戰後補償問題資料集 第四集≫ (戰後補償問題硏究會, 1991年) 8쪽 이하의 各表에서 作成. 단, 1944년 이후는 予定數 혹은 概數이고, 실제로 動員된 數와 달라진 것에 注意.

〈表 7〉 主要 交戰國의 生産 年齡에 대한 動員率 (1944年末)

| | 軍動員 | 勞力動員 | 合計 |
|---|---|---|---|
| 日本 | 11 | 71 | 82 |
| 독일 | 31 | 53 | 84 |
| 소련 | 24 | 61 | 85 |
| 영국 | 19 | 66 | 85 |
| 미국 | 15 | 60 | 75 |
| | % | % | % |

大江志乃夫 편 · 해설≪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動員概史≫ (不二出版, 1988年) 320쪽.

〈表 8〉 主要 交戰國의 産業別 勞力動員配分

| | 軍需産業 | 民需産業 | 農業 |
|---|---|---|---|
| 日本 | 39 | 21 | 40 |
| 미국 | 35 | 48 | 17 |
| 소련 | 35 | 32 | 23 |
| | % | % | % |

大江志乃夫 편 · 해설≪支那事變大東亞戰爭間動員概史≫ (不二出版, 1988年) 321쪽에서 作成. 소련의 數値가 맞지 않지만 원 자료대로 기재했다.

〈表 9〉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편≪强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証言≫ (明石書店, 1990年) 揭載의 '証言'

1. '强制連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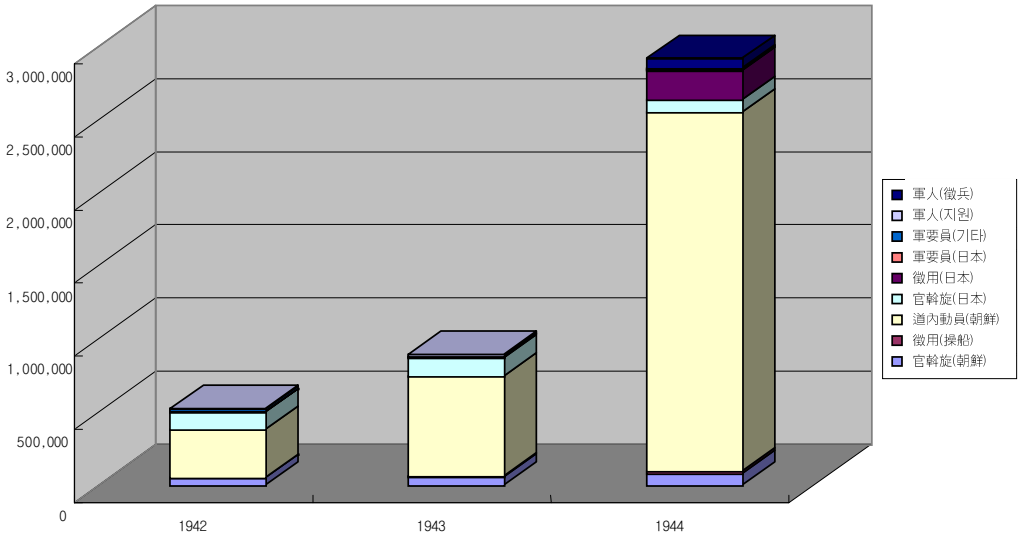
| 番號 | 渡日年月 | 年齡 | 渡日經緯 | 勞務先 (都道府縣) | 勞務先 (種類) |
|---|---|---|---|---|---|
| 1 | 1943/4 | 14 | 拉致 | 長崎 | 炭鑛 |
| 2 | 1943/11 | 22 | 徵用 | 福岡 | 炭鑛 |
| 3 | 1942/2 | 17 | 拉致 | 福岡 | 炭鑛 |
| 4 | | | 徵用 | 福岡 | 炭鑛 |
| 5 | 1942/1 | 19 | 徵用 (형 대신) | 兵庫 | 工場 |
| 6 | 1939 | 20 | 募集 | 宮崎 | 土建 |
| 7 | 1944/1 | 24 | 徵用 | 東京 | 工場 |
| 8 | 1943 | 17 | 徵用 | 長野 | 土建 |
| 9 | 1930 | 20 | 自主渡航 | 長野 | 土建 |
| 10 | 1942/11 | | 徵用 | 秋田 | 鑛山 |
| 11 | 1943/9 | | 徵用 | 京都 | 鑛山 |
| 12 | 1943 | 21 | 募集 | 北千島 | 土建 |
| 13 | 1939 | 18 | 拉致 | 北海道 | 鑛山 |

2. '强制勞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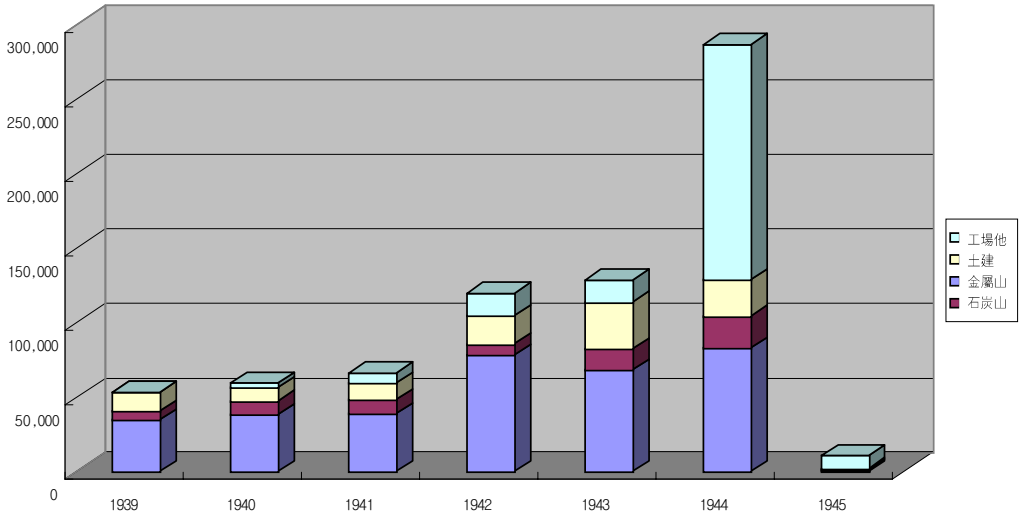
| 番號 | 渡日年月 | 年齡 | 渡日經緯 | 徵用等年月 | 勞務先 (都道府縣) | 勞務先 (種類) |
|---|---|---|---|---|---|---|
| 14 | 1932이전 | 19 | 自主渡航 | | | |
| 15 | 1932이전 | 16 | 自主渡航 | 1944 | 大阪 | 荷役 |
| 16 | 1939/4 | 22 | 自主渡航 | 1942/10 | 鳥取 | 土建 |
| 17 | 1938/2 | | 自主渡航 | | | |
| 18 | 1939以前 | | | | | |
| 19 | 1918頃 | | 自主渡航 | | | |
| 20 | | | | 1944(學徒動員) | 奈良 | 土建 |
| 21 | | | 自主渡航 | | | |
| 22 | 1934 | 16 | 自主渡航 | | | |
| 23 | 1926 | 13 | 自主渡航 | 1942 | 埼玉 | 工場 |

朝鮮人强制連行眞相調査團 편『强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証言』 (明石書店, 1990年) 에서 作成. 도일 년월이나 연령에 관해서는 증언에서 추계한 것이 포함되고 일부 불정확한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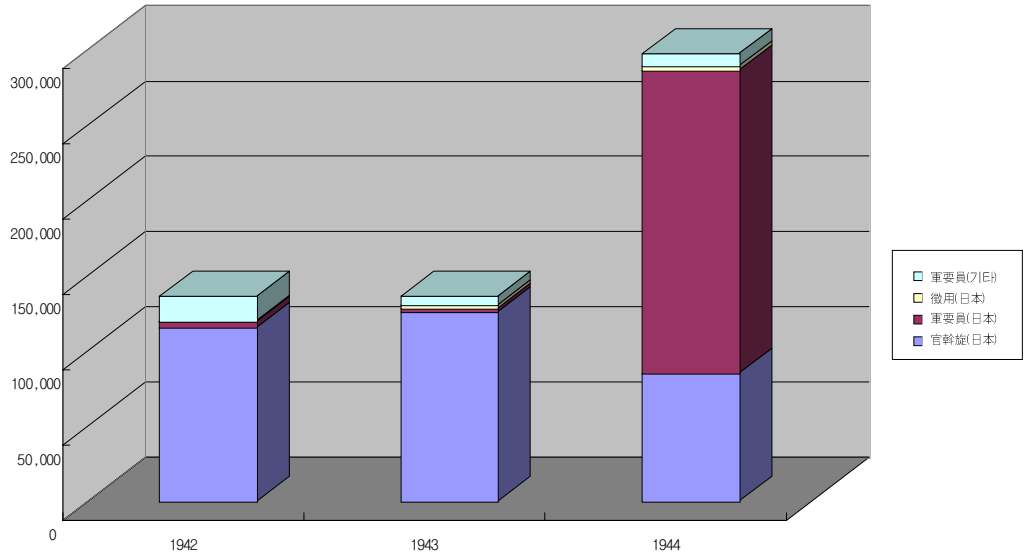
〈그래프 1〉 朝鮮半島에서의 總動員(軍人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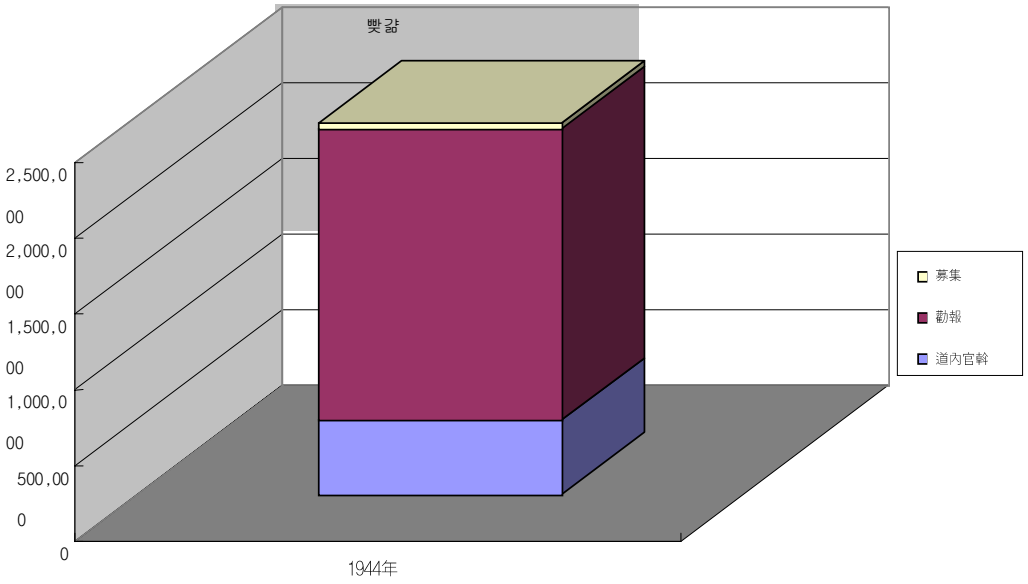

〈그래프 2〉 朝鮮半島 外로의 勞務動員(行先別)



〈그래프 3〉 朝鮮半島 外로의 勞務動員(勞動形式別)




〈그래프 4〉 道內動員의 內譯(勞動形式別)



[비평문]

정 재 정

이 논문은 일본이 총력전체제 아래에서 조선인을 어떻게 동원했는가를, 정책・제도・규모・상황 등의 측면에서 比較史的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을 포함해서 세계의 식민지 총동원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①식민지정부는 고도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었다, ②식민지정부와 군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③본국정부는 開戰初期에 명확한 동원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④본국정부는 식민지에 의존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⑤식민지 동원은 상황에 꿰맞추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⑥식민지는 종주국에 대해 놀라울 만큼 순종적이었다, ⑦식민지인들은 종주국의 대의를 신봉한 것은 아니었다. ⑧식민지인들이 바라지 않은 지배에 말려들고, 이용당하면서도 저항력을 상실한 것은 정보획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종래의 연구가 강제연행의 실상이나 피해자의 경험을 청취・조사하는 데 집중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대담하게 세계사적 시야에서 총력전체제기의 조선사회와 조선인동원을 재검토했다. 최근 비교사적 연구가 유행하는 역사학계의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참신하고 자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식민지지배나 전시체제에는 일반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많다. 조선에서의 법적, 제도적, 사상적 탄압은 대단히 강했다. 왜, 한국인의 민족운동이 만주・중국・美洲 등 국외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국내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조선에서 조직적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인적 동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本末의 顚倒가 아닌가? 나치하의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가 활발했는데, 조선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인식과 비교기준을 잘못 제시한 것 아닌가? 조선에서는 國民精神總動員運動・國民總力運動과 같은 官民一體의 동원체제가 만들어지고, 愛國班 등을 통해 총독이 가정 하나하나까지도 물샐 틈 없이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또 조선에서는 동원체제가 강화되면 될 수록 태업, 암거래, 도망, 유언비어 등의 저항이 확산되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華北朝鮮獨立同盟 등의 對日 항쟁도 격화되었다. 이것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 못지않은 저항운동이었다.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것과 같은 동원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는가?

둘째, 총력전은 '나의 전쟁', '국민의 전쟁', '시민의 전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조선인의 동원은 '타인의 전쟁'에 대한 동원, '내셔널리즘이 없는' 동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압적・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극단적인 皇國臣民化政策도 그 일환이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조선인이 왜 저항하지 않고 동원에 응했는가를 밝히겠다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 과연 타당한가? 타국과의 비교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조선총독부가 본국에 '독립'적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무엇의 '독립'인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했나?

[집필자 답변]

귀중한 코멘트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점도 있기에, 그 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식민지지배 하 혹은 점령 하에 있어 타 지역과 비교해, 조선반도에서의 일본의 탄압이 다른 지역보다 가혹했다는 주장이지만, 비판할 때는 최소한,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 각지에는, 인구에 비해 조선반도보다는 훨씬 많은 저항에 의한 사상자와 체포자가 발생한 지역이 많이 있으며, 또한 총력전 시기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저항도, 상징적 의미는 제쳐두더라도, 그 물리적 저항의 규모가, 프랑스에서의 레지스탕스에 필적할 규모라는 것을 수량적 데이터 등으로 실증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의 일본지배 특수성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주관적 평가의 표명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적어도 데이터에 의한 실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통제가 강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당착적인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저항이 최종적으로 총독부측의 동원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의 영향력을 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며, “계획 수행에 큰 지장 없이 동원이 이뤄졌다”는 것과 “(총독부 측에서 볼 때) 원활하게 동원이 이뤄졌다”고 말하더라도 언어 정의상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저항을 원했다는 것과 저항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그 저항이 유효한 타격을 상대에게 주었다는 것도 역시,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유효한 비교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를 할 때는, 주관적 평가를 일단 배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주장되지 않았다. 만일 주25에 있는 “일체화되어 이 작업을 행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제도적/행정적으로 보아 조선총독부가 내각과 제국의회의 직접적 통제 하에 없었다는 점은 구헌법을 일견하면 명백하며, 또한 현실 운용을 봐도 이 점을 부정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총독부와 내지 여러 기관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총독부관료의 여러 회상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더 정확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상기와 같은 고정적 논의를 떠나, 총력전 시기에 있어서의 조선반도지배, 혹은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지배 자체에 관련되는 담론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다.